

생소한 온라인 시험 평가 공정성엔 어떻게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지난 20일 실험·실습수업의 대면 강의가 제한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를 막을 실질적 대안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지난 3일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은 “1학기 중간고사 출석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과제물 평가 등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대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시험을 실시하는 과목이 생겨나면서 그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campus’로 치를 시험을 앞둔 곽재은(국어국문학 2019) 씨는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시행하면 공정성이 보장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A 씨 또한 “시험 도중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며 “온라인 시험은 공정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온라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강사를 위해 ‘명예규율’을 만들었다. 명예규율은 ‘교수와 학생이 책임감 있는 학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율이다. 학생은 시험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활동 중 허락되지 않은 형태의 도움을 주고받지 않는다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우리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명예규율은 없지만 개별 과목에서 교강사의 선택에 따라 사용된 적 있다”며 “시험 부정을 방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학사지원팀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만든 명예규율을 각 단과대학에 안

내했다”며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슷한 상황의 타 대학은 ‘온라인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교수에게 ‘부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공문을 안내했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 간 답안 공유를 막기 위해 문제 풀이 시간을 짧게 하고 서술형 문제를 지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 교·강사 및 학생 제보 적극 수집, 제보된 교과목에 수강생 전수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뢰할 것”이라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하더라도 기말고사는 원칙적으로 대면 시험을 치를 것”이라며 “거리두기를 위해 평소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기말고사 기간을 1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학교는 “비대면 강의를 1학기 전체로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5월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일 양캠퍼스 학사지원팀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격하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직 코로나 19가 ‘심각’ 단계라 대면 강의 전환에 대한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가올 기말고사도 온라인 시험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말고사와 관련해 서울캠 학사지원팀이 내놓은 “6월까지 대면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기말고사 출석 시험도 실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언급이 학교 측 입장 전부인 상태다.



그늘진 강의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되며 중간고사도 강의실에서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대면 강의 전 기숙사 입사 진행, 예방 행동수칙 준수 필요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지난 20일부터 실험·실습·실기 등 일부 대면 수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국제캠퍼스(국제캠) 기숙사 우정원의 임시 입사가 시작됐다. 임시 입사 대상은 대면 수업 수강 학생, 교내 연구 활동 목적으로 임시 거주가 필요한 학생, 기타 학업 목적으로 임시 주거가 필요한 학생이다. 서울캠퍼스(서울캠) 기숙사 세화원, 삼의원은 사전 입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행복기숙사는 입사 수속일을 연장한 상태다.

국제캠 생활관 유중근 계장은 기숙사 임시 입사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 조건으로 학생들의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했다”며 “입사 대상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주거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부득이하게 교내에서 연구 및 학업 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

영해 임시 입사 대상을 확대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 임시 입사 신청자는 모두 우정원에 거주하게 된다. 유 계장은 “임시 입사를 하게 된 학생이 아직 두 건물(제2기숙사 남자동, 여

자동)로 나뉘어 들어갈 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건물로 이루어진 우정원으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현재 임시 입사 신청자 수는 약 70명으로 대면 수업 증가에 따라 신청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캠 기숙사(행복기숙사, 세화원, 삼의원)는 계속 입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행복기숙사는 약 400명, 세화원은 약 120명 정도가 입사했고 삼의원 또한 현재 100여 명 정도 입사를 신청한 상태다. 행복기숙사 측은 “입사 조건에 따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는 않다”며 “실험 실습 문제 등의 여건을 고려해 계속 입사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특성상 본가가 먼 학생들이 많다”며 “수업이 없더라도 서울에서 부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고 입사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기숙사 측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계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내 코로나19 상황실 및 질병 관리본부 지시에 따라 감염자 거주 층을 폐쇄하고 철저한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학생들의 안전

을 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 학생들을 제2기숙사로 임시 이동 거주 후, 감염 차단 및 관리가 확인되면 재입사 시킬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예방 행동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책임 망각한 기성 언론의 보도행태를 지탄한다”

김자원 기자 kzw990327@khu.ac.kr

지난 6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한 29개 대학 언론사가 이름을 올렸다.

서언회는 성명서 발표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이 n번방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선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소비거리로 전락시켰다”며 “이에 서언회는 기성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언회는 “n번방 사건은 대한 민국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린 여성 성착취를 뚫고나온 결과”라며 “국민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동의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 청원은 한국사회 의 끊임없는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기성 언론의 잘못된 보도관행이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와 기회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판단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를 통해 서언회는 가해자의 불 필요한 서사를 보도하는 ‘기성 언론의 가해자 중심 보도’와 유명인 중심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본질을 흐리는 기성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 중심의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설 것’,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보도를 멈추고 진실과 본질을 추구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기에 언론이 제 빛을 찾는 날까지, 서언회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면안내

줌(Zoom) 보안 문제,

“미흡한 점 있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플랫폼”

» 2면

타자화와 배제로 빚어낸 ‘청년’, 범주에 대한 성찰이 우선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연재 기획

» 3면

제21대 총선, 공약(空約) 아닌 공약(公約) 될까

동대문갑, 용인시을, 수원시무 당선자 공약 해설

» 4면

다음 신문은 5월 18일자로 발행됩니다

뉴스

등록금 논의, '소통위원회'로

김창호 기자 k.c_hoxx@knu.ac.kr

[서울] 대학본부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서울캠 총학)가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소통위원회'를 구성한다.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학교-학생 간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서울캠 총학 죄인성(생물학 2016) 학생회장은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 대신 등록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부총장 선임 전까지 미래 혁신원장 주관으로 발족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19 대책 ▲학사일정 문제 ▲학내 시설관리 등 학내외 여러 이슈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대학본부와 학생 간 소통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해체되는 일시적 회의체가 아닌,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회의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소통위원회 세부사항은 현재 조율 중에 있다. 첫 회의 날짜와 회의 주기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소통위원회 구성은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 간 의견 차이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대학본부가 "등책위 대신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서울캠 총학에서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 '온전한 등록금 논의'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대학본부는 총학 측의 조건을 받아들여 않자 합의는 결렬됐다. 이어서 서울캠 총학은 등책위 개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등을 벌였다. (위 사진. 서



울캠 총학, '등책위 개회' 놓고 대학본부와 갈등/대학주보, 2020.3.30)

하지만 대학본부와 서울캠 총학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논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최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대학본부와의 관계가 경직됐지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신속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선제적인 연락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지원센터 송기현 행정과장 역시 "한 차례 소통위원회 구성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후 대학본부와 총학간의 배려가 맞물려 이뤄진 결실이 소통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소통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서울캠 총학이 꾸준히 요구해온 등책위 개회와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가 당장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부총장 선임 전에는 등책위 개회가 어렵다고 하니, 부총장 선임과 동시에 소통위원회 안건으로 등책위 개회를 상정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 사

태 수습 전에는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가 어렵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전했다.

등록금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해 송 행정과장은 "코로나19의 진행에 따른 예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사태 수습 전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취합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대학본부 입장에서 업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러스가 종식되거나 1학기가 끝나면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타 대학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록금 재논의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7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 이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 총학과 대학본부의 면담이 이뤄졌다. 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ERICA 캠퍼스는 '코로나 19 관련 지원 예산 집행 내역'을 제공하라는 요구에 학교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 '푸른광장 지붕' 철거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이에 학교 측은 "공사 중 동아리방 출입문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막는 보양 작업을 시행했지만, 보양이 미비한 문틈 등으로 미세분진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6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받았다"며 "공사 완료 시 청소를 시행하기로 약속했고 미세분진을 최대한 제거하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정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푸른광장 지붕을 철거한 후 불법 증축 문제는 해결됐다. 다만, 지붕 철거 후 푸른광장 아래 강의실인 176호, 176-3호에 우천시 누수가 발생해 푸른광장 바닥 방수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푸른광장 바닥의 추가 방수 공사가 필요했다"라며 "동시에 주변 환경 점검 결과 동아리방의 환경 개선도 필요함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철거 공사 이후 진행된 환경 개선 공사는 동아리별 요청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공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대 행정실이 협의를 거쳐 천장 누수 방지를 위한 차양 설치, 외벽 새시 부착물 일괄 제거 및 개선, 냉·난방 시설 점검, 동아리방 내부 장판 교체, 동아리방 명패 제작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방으로 미세분진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줌(Zoom) 보안 문제, "미흡한 점 있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플랫폼"

<화상강의시스템>

김가연 기자 rkdlus0617@knu.ac.kr

코로나19 사태로 이용률이 급증한 화상강의시스템 '줌(Zoom)'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학교는 사용자 제한, 고유 ID 설정 안내 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지난 30일 우리학교는 화상강의시스템 줌 기능이 포함된 신규 온라인 강의 플랫폼 이캠퍼스(e-campus)를 도입했다. 줌은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수업은 물론 출결 확인에도 용이하다. 또한 각 사용자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본인의 컴퓨터 화면을 회의 참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캠퍼스는 실시간 강의를 지원하고 모바일 학습을 촉진화했다.

하지만 만이 같은 줌이 최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줌 폭격

(Zoom Bombing, 화상 회의에 원치 않게 침입해 방해하는 행위), 개인 정보 유출, 중국 서버로의 데이터 전송 등으로 인한 각종 보안 문제가 빚어지면서 그 취약성이 지목된 것이다.

줌 폭격은 화상회의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음란 영상을 올리거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사이버 테러를 지칭한다. 9~11자리 숫자로 구성된 ID를 이용해 간편 접속하는 줌의 편의성을 악용한 것이다.

줌에서 생성된 화상회의 정보가 중국 서버를 거친다는 사실 또한 논란이 됐다. 줌은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이지만, 개발자가 중국계 미국인이며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이 취득한 정보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줌 CEO 에릭 위안은 "당분간 모든 개발 업무를 중지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는 "줌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훈련스러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선 최선의 플랫폼으로 여겨진다"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즉각 피드백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캠퍼스 이용 안내에 공지한 'Zoom 안심 설정: how to prevent zoom bombing?'과 '화상회의 플랫폼 안심 설정 안내' 등 보안 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안 문제를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센터에서 올린 안심 설정 게시글엔 줌 폭격 관련 기사 링크와 줌의 자체 보안 업데이트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돼 있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유한 회의 ID 자동 생성', '사용자 제한 설정', '2인 이상의 호스트 지정을 통한 회의 환경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센터 측은 "학교 자체 시스템에 로그

인한 후 줌을 이용하는 이중 보안 설정을 해놨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보안 문제는 줌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늘 주의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보안 논란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줌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구글, 스페이스X 등 일부 민간 기업도 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온라인 개학을 위한 시스템으로 줌을 권장하고 있다. 주요 대학 또한 보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줌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

해선 대학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줌의 보안 관련 이슈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는 "현시점에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훈련을 가중시킬 것"이라 고 말했으며, 중앙대학교도 "현재로선 줌이 최적의 시스템이라 여겨진다"며 "보안 이슈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국내에선 아직 줌 폭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란이 생긴 후 줌의 보안패치를 업데이트 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한근태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n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n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8(기흥동) | Tel 02-961-0093-5 |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타자화와 배제로 빚어낸 '청년', 범주에 대한 성찰이 우선

1부 '청년'은 없다

김수혁 기자 sherk@kn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연재 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1. 청년은 없다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논하기 위해 서는 현재 통용되는 청년이라는 범주 자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기획은 '청년정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에 대한 즉답을 유예하고 먼저 사회에 의해 청년이라는 범주가 구성된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88만원세대', '3포세대'와 'N포세대', '달관세대', '공정세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유통돼 온 말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세대명칭은 특정 연령집단의 특징을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세대론'의 도구로 사용돼왔다. 이 가운데서도 '88만원세대'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분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 '밀레니얼세대' 같은 세대 구분 명칭은 존재했지만 '88만원세대'의 등장 이후 쏟아져나온 청년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들의 흐수는 이전과 구분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만하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김선기는 저서 『청년팔이사회』(2019, 오월의봄)에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88만원세대론'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언론을 통해 유통된

청년세대를 가리키는 세대명칭이 적어도 30여 종에 달한다고 정리했다. 이 가운데는 '3포세대'나 '달관세대'처럼 비교적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실크세대', 'IP세대', 'C세대', 'V세대', '팬텀세대' 등 이름만으로는 뜻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것들도 다수 있다.

저자는 각종 매체가 경쟁적으로 쓸 아난 다양한 세대명칭과 이를 둘러싼 세대담론이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일정한 특징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개념을 동원해 해석하려는 현상인 '세대주의'에 기반한 사고방식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1990년대 세대사회학이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소개됐고 당시 20대였던 1970년대생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 '신세대'(혹은 'X세대') 담론을 시작으로 세대주의에 입각해 청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일련의 세대명칭과 세대담론이 '청년'으로 호명되는 집단에 속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다분히 외부규정적인 특징을 뛴다고 지적한다. 1990년대 '신세대' 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세대론의 특징적인 부분은 청년이라는 개념의 확장이다. 청년이라는 말이 그 전까지는 다소 문학적

이고 상대적인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된 반면 '신세대' 담론부터는 전체 인구 가운데 특정 연령집단. 혹은 출생 연도를 공유하는 집단 전체를 포함하는, 거대하고 구체적인 지시대상을 가진 개념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세대론이 유독 '청년세대'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세대 문제에 대한 탐구는 사회와 문화의 변동을 예측해보는 일과 긴밀히 연관된다"면서 "젊은 층의 현재 모습이 곧 사회의 미래상과 연동된다고 여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결국은 청년담론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기성세대가 '청년으로 호명되는 이들'을 정의내리고 이해하는데 사용된다. 저자는 청년담론의 이런 작동방식이 청년 개개인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지우고 편리하게 타자화한다고 비판한다.

사회학 연구자 조귀동의 저서 『세습 중산층사회』(2020, 생각의힘)는 청년 세대 내부의 이질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룬다.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들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제목을 가진 이 책은 특정 세대의 정서적, 문화적 특질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는 종래의 세대론과는 달리 현재 청년들이 체험

하는 경제적 현실에 초점을 맞춘다.

『세습중산층사회』는 오늘날 청년층 내부 분화의 핵심 지점을 일자리에서 찾는다. 현재 노동시장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전문직으로 구성된, 초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약 10%의 '번듯한' 일자리와 여기에 속하지 못한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구분한다. 저자는 이 10 대 90의 구도에서 어느 쪽에 속할지 한번 정해지면 변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 격차는 개인의 힘으로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의 10 대 90 구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이다.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과 카이스트, 포스텍 등 일부 지방소재 공대와 의치대 졸업생들이 '번듯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시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이들은 대체로 특목고, 자사고, 명문 일반고 출신들이며 교육 환경은 본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경제·사회적인 능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저자는 교육과 취업의 이중선별구조를 통과했거나, 통과하는 중인 20대와 선별구조 바깥에 자리한 20대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들에 반응하는 양상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정국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이 입시에서 인턴 경력이나 논문 공동 저자 등재 등의 방법으로 '특혜'나 '반칙'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언론에서는 '조국 일가의 불공정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줄기차게 호명했는데 이때 등장한 청년 당사자들은 대부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최상위 명문대학생들이었다. 조귀동은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세대'라는 명제가 실제로 청년층 전체의 의식을 대변하

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난해 9월 9일 직후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결과에 따르면 부정 49.6% 대 긍정 46.6%로 종합결과에서 양측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20대의 답변 결과는 오히려 부정 44.0% 대 긍정 51.8%로 30대(32.3% 대 62.3%)와 40대(45.2% 대 53.6%)와 함께 긍정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이때는 이미 세대효과보다는 정치적 진영결집이 판단에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언론에서 유통된 공정담론과 실제 20대의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기 위해 조귀동은 한겨례21과 글로벌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20대를 경제적 계층에 따라 구분해 시행한 이 조사에서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라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상층 이상에서는 33.3%였지만 중하층과 하층에서는 18.8%, 12.5%였다. 저자는 '조국 사태' 국면에서 공정에 대한 기대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분노한 것은 20대 전체가 아니라 대체로 경제적 중상층에 걸치는 교육·취업의 이중선별구조의 안쪽에 속한 이들이었고 선별구조 바깥에 있는 20대의 태도는 냉소나 체념에 가까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청년이라는 범주가 타자화와 배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곧바로 청년정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청년이라는 범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청년으로 호명되고 청년을 자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현실에 청년정치의 역할을 요구하는 의제들이 존재한다면 불충분한 범주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되어야 한다.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도전

꿈에 도전하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 20 ~ 27세 이하인 남·여)
※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1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2기 선발(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5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학군사관 모집안내]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6. 13.(토), 합격자 발표 : 7.10.(금)
 - 2차 면접평가 : 9. 7.(월) ~ 9. 25(월)
합격자 발표 : 10.16.(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12. 4.(금)

학군사관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ROTC)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문의처 **지원대학 학군단**
서울 : 02-961-0085~6
국제 : 031-201-3271~4

기획

우리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가 바꿀 청년의 삶은?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인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을 통해 대학과 청년의 삶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살펴본다.

안규백, “주민과 함께한 동대문 발전, 안규백이 더 크게 열겠다”

서울 동대문갑에서 당선된 안규백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공약으로 ‘캠퍼스 문화특구 조성’을 약속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1 기초자치단체-1 특화거리’의 일환이다. 회기로와 경희대로 일대를 캠퍼스 문화특구로 지정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이 성공한다면 흥익대학교와 주변 상권처럼 우리학교 학생은 학교 특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상권 상인은 매출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화거리는 많은 지역에서 조성한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특징 없는 특화거리로 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안 의원은 청년 정책으로 ‘예비군 훈련 1년 단축 및 동원 훈련 보상 비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병 전역자는 전역한 날부터 8년이 지난 때까지 예비군 편성 대상이며 훈련은 1년 차에서 6년 차까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4만 2천 원, 지역 예비군 훈련 실비는 1만 5천 원이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예비군에 편성된 우리학교 학생은 훈련으로 학업에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고 개선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약과 유사한 지난 2018년 국방부에서 발표된 ‘국방 개혁 2.0’에 따르면 예비군 전체는 275 만 명 규모로 유지되지만 동원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1년 단축 계획에 따라 기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그러나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 예비군 95만 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김민기, “더 큰 용인 만들겠다”

경기 용인시에서 당선된 김민기 의원은 ‘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취·창업지원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원스톱(One-Stop)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청년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해 재학생과 졸업생 및 지역 청년이 취·창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취업진료 지원처다. 공약 이행으로 국가지원이

늘어나면 기업 설명회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난 1월 용인시 3개 구에 청년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자체 청년센터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국제캠퍼스 학생의 정치 흥미 감 고등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배달수수료 등 부담 경감 지원’을 약속했다. 작년 12월 국내 점유율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은 매각된 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변경했다. 업체가 불가피하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 당시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공공앱 개발·보급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0대의 25.2%가 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앱이 개발되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독점 체제인 배달앱의존도를 낮춰 가격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의 공공앱 개발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 있어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진표, “더 큰 수원의 완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경기 수원시에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인과 ‘청년경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청년정책 공동공약 발표 행사에서 “청년 기업인의 패기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청년들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담보물을 빌려 웅자를 받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창업인의 능력과 기술을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이 미래가치를 평가해 선도 투자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투자한 것을 보고 자금을 가진 기업이 후속 투자해서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GEM)의 2016·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 비율은 15세에서 24세는 1.8%, 25세에서 34세는 4.7%로 각각 62위를 기록했다. 또한,

창업 업종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46.4%가 몰려 미국(22.1%) 등에 비해 도·소매업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약 실천으로 투자처가 확보되면 경쟁력 있는 청년 스타트업 등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태계 구축 방법은 과제로 남아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공약 이행률은 46.8%다.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더 잘 지키도록 우리학교 학생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바꿀 제21대 국회의원은?



안규백 당선자



김민기 당선자



김진표 당선자

서울 동대문갑 당선자
국방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을 당선자
정보위원회 위원장

경기 수원시무 당선자
국회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저작권보호원
주관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2020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2020. 3. 18(수) ~ 5. 18(월)

| 공모내용 |

구분	분야	대상
정책제안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전국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
표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표어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

| 작품규격 |

정책제안 5매 내외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 개인 또는 팀(대표 포함 3인 이내) 참여 가능
- 자유양식(노리집 서식 참고)
- 서류심사 선정 시 자문(멘토링)을 거쳐 10분 내외의 발표자료 준비

표어 띄어쓰기 포함 30자 이내의 간결한 문장

- 개인 참가만 가능하며 1인 3편 이내로 제한
- 작품설명 100~200자 필수기입

| 공모일정 |

분야	추진일정
정책제안	작품접수(3.18 ~ 5.18) → 서류심사(5월 말) → 전문가 자문(6.5 ~ 6.16) → 발표심사(6.19) → 결과발표 및 시상식(6월 말)
표어	작품접수(3.18 ~ 5.18) → 서류심사(5월 말) → 결과발표 및 시상식(6월 말)

* 자문(멘토링)과 발표심사는 정책제안 부문만 해당

* 공모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PT 발표를 진행할 경우를 신청해 50만 원 이내 지원 및 전문가 자문(멘토링) 진행

| 접수방법 |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spectory.net/kcpa/protection

| 공모기간 | 2020. 3. 18(수) ~ 5. 18(월), 24시까지

| 시상내역 |

구분	상훈	정책제안	표어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점(200만 원)	1점(100만 원)
우수상		2점(100만 원)	1점(50만 원)
장려상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3점(50만 원)	2점(30만 원)

* 정책제안 서류심사에 통과된 6팀 대상 PT 지원금 50만 원 이내 지원

* 정책제안 대상 상금 중 50만 원 이내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됨

* 정책제안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금의 50% 이내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됨

*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문의사항 |

• 운영사무국 : 02-6953-1310

• 전자 우편 : protection@contestweb.net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불법복제해소공모전

• 운영 시간 : 월~금 09:30~18:30(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